

“윤석열 정권 쫓아내고 평화·통일로”

8.15 노동자대회·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 ... “노동자·민중 거역 정권 존재 역사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들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일본의 환경범죄에 동참하는 정권 퇴진 투쟁을 이어 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8월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이 함께 했다.

노동자대회 투쟁 발언에 나선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장은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달려와 달라”라며 공장 화재와 일본 닛토 자본의 먹튀, 손배·가압류 협박과 공권력을 동원한 공장 침탈 등 탄압 상황을 설명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많은 노동자가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는 역사를 깨달았다. 이 역사로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라며 “우리



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싶다. 먹튀 자본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싶다. 구미로 와달라”라고 연대를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전 70년이지만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미·중 패권 다툼 한복판에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느냐, 평화를 도모하고 통일로 나아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정세를 평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뜻을 거역하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의 사실을 똑똑히 보여 주자”라며 ▲한반도 평화 쟁취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

은 같은 자리에서 이어 간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와 ‘광복 78주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대회’에 연달아 참가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범국

민대회 투쟁사를 통해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윤석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압박해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윤석열 퇴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외쳤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철도, 에너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거대 자본인 재벌·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더욱 몰아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공동과업에 돌입한다”라며 “지지와 연대를 보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산별노조의 ‘사’ 도 모르는 윤석열과 꼭두각시 노동부

민주노총·산별,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공동투쟁 ... “노조 괴롭히기가 정부 노동철학인가?”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ILO 협약을 완전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자주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무리하고 무식한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8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진행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무리한 시정명령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노동부는 지난 5월, 6월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의 규약과 규정, 공무원노조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 등의 집단 탈퇴를 제한하는 규약·규정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관한 노조법 5조와 노동조합 총회에 관한 16조 등에 반한다는 것이 시정명령 이유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조합원 구속 탄압,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을 추진해왔다” 라면서 “급기야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으로 민주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라고 일갈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산별노조를 앞장서 조직하고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주력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조 규약 시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며 단호히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헌법은 노동조합이 규약·규정과 조직운영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라면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인 논의와 결의로 정한 규약을 정부가 행정 자력으로 재단해 시정명령을 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삼권 침해다” 라고 강조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법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라면서 “국가가 행정력으로 개입해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라면서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3조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규약 작성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은 2022년부터 발효해서, 윤석열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ILO 핵심협약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뒤로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기업별 노사교섭 체계를 강화하는 모순 행태를 보인다” 라며 “그저 ‘노조 괴롭히기’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문제에 관한 유일한 철학처럼 보인다” 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등은 “윤석열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산별노조의 정당한 내부통제권을 무력화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조치이며, ILO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정처분이다” 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 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산별노조운동 탄압에 맞선 공동투쟁에 나선다” 라고 선포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삶과 일자리 원상회복하라”

일본 자본 비호 구미시청·경찰 규탄 기자회견 ... 닛토 이익 위해 태풍 속 철거 장비 투입 시도

구미시가 태풍이 몰아치는 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철거 장비 반입을 시도하자, 금속노조가 사람이 다치는 등 사고를 우려해 막아섰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화해 권고를 무시하고 고소·고발·손해배상·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일본 닛토 자본과 노동자 생존권은 외면하고 자본 비호에 나선 구미시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닛토덴코그룹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분 100% 소유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8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화해 권고 무시-손배·가압류 협박 일본 닛토그룹 비호, 태풍 속 공장철거 장비 반입 시도 구미시청·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일본 자본의 먹튀 청산으로 억울하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많은 외국계 회사들처럼 닛토 자본도 온갖 특혜와 노동자 착취로 이윤을 챙기고, 더 큰 이윤을 위해 먹고 튀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계이츠, 한국산연, 한국다이셀,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 투자회사들이 한국에서 갖은 혜택을 다 누린 후 자본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포함한 외국계 투기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의 희생을 막

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닛토덴코그룹은 현재 별도법인으로 운영 중인 평택공장에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생산하던 물량을 빼들려 생산하고 있다. 일본 자본은 이를 위해 평택공장에 노동자 2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닛토 자본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남은 열세 명의 고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회사에 묻고 싶다”라며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불탄 공장 재건하자는 노동자들의 요청에 공장 팽개치고 나간 것은 닛토덴코 당신들이다”라고 분노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닛토덴코 자본은 토지 원상회복을 위해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원상회복해야 할 것은 토지가 아니라 열세 명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투자유치 명분으로 온갖 특혜와 단물만 빼먹고 폐업하는 외투기업들이 상당수다”라면서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왜 한 번도 먹튀 외국 자본에 책임을 묻지 않는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은 먹튀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투쟁이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지난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노동자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상임위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조귀제 정의당 노동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 양당은 서로 남 탓하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을 챙기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외투기업에 온갖 특혜를 몰아준 구미시는 노동조합의 물리적 마찰까지 유도하면서 먹튀기업을 편드는 부끄러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가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에 세운 연 매출 4,000억 원, 순수익 260억 원의 알짜 회사였다. 구미시는 공장용지 50년 무상제공,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보장했다.

닛토덴코 자본은 지난 2022년 10월 공장 화재를 핑계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을 일방 결정했다. 화재 원인은 사측의 관리부실이었다. 재건 비용 1,000억 원을 웃도는 화재 보상금 1,300억 원을 받는데도 일본 자본은 청산 결정을 강행했다.

지난 8월 9일 태풍 ‘키논’이 한반도에 상륙한 날 저녁 구미시는 경찰과 함께 공장에 철거 장비 반입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이 저항해 막았다.